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하고 한미 FTA 국회비준을 막자!

전 국민의 분노 앞에 눈 가리고 아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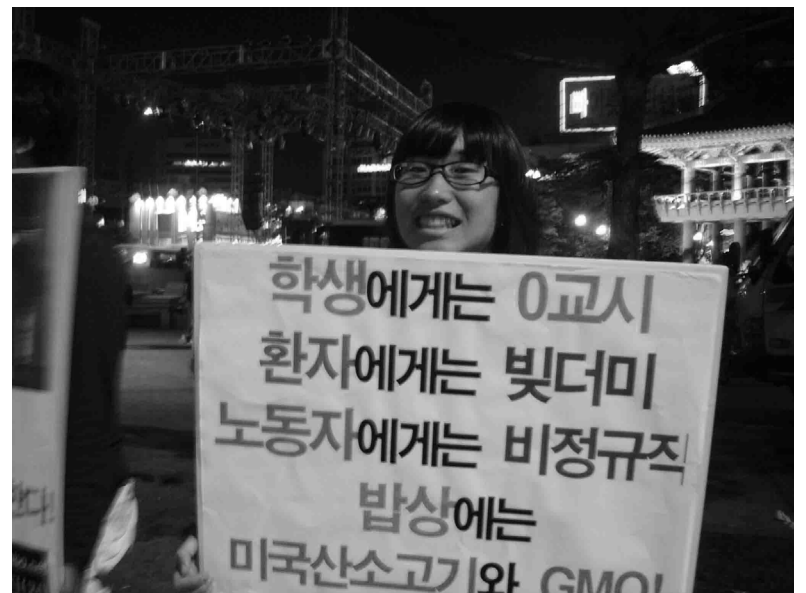
정부는 5월 20일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명문화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회복했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의 문서에는 "모든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및 자유무역협정(WTO)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만 담겨 있을 뿐이었다. 여러 언론이 지적하듯 연령 제한이나 동물성 사료 규제 강화는 추가 협의에서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고, 정부가 주장하는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조차도 미국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검역주권과 안전성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그 누구도 식량의 안전성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과 민중의 건강권을 포기해버린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정권은 '불법시위', '배후세력' 따위의 헐박으로 잠재우려고 하더니,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기만적인 말장난에 불과한 종잇조각을 들이 밀며 민중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 주권"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광우병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전 국민이 전 세계 농민의 생존과 민중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자본주의 농업/식량 생산 체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광우병의 직접적 원인이 1970년대 영국 및 서구 국가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육골분 사료를 소에게 먹이기 시작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광우병의 직접적 원인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 송아지를 기르고,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사료와 성장호르몬, 항생제, 영양제를 투입하여 상품성 있는 육류 상품을 만들어내고, 냉동포장 유통하는 전 과정을 장악한 거대한 초국적 기업이 그 중심에 있다. 이들은 비용을 낮추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검역마저도 최소화하려고 한다. '과학적 기준에 따라 교역의 규칙을 세워야 한다'느니 '광우병의 발병 가능성, 감염 확률이 지극히 낮다'느니 하는 말들은 광우병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대다수 민중에게 돌리면서 초국적 농식품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다. 국제적인 농민운동이 주장해 온 식량 주권, 즉 "생태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 민중들이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바로 광우병 논란으로 드러난 자본주의적 식량 생산 체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사회화와 노동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 사회진보연대



광우병에서 한미 FTA 반대로,

이명박 정부의 재벌중심 세계화를 중단시키자!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조치의 뒤에는 바로 한미 FTA가 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광우병을 발생시킨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체도와 정책이 한국에 그대로 수입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민중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한미 FTA를 하루 빨리 체결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은 "한미 FTA가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 FTA는 노동권도, 식량, 의료, 교육, 물 등에 대한 민중의 권리도 모조리 포기한 채 오직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재벌만 살아남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로 시작된 투쟁은 한미 FTA와 민중의 권리를 포기하고 재벌만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을 이명박과 한미 FTA 반대로 확장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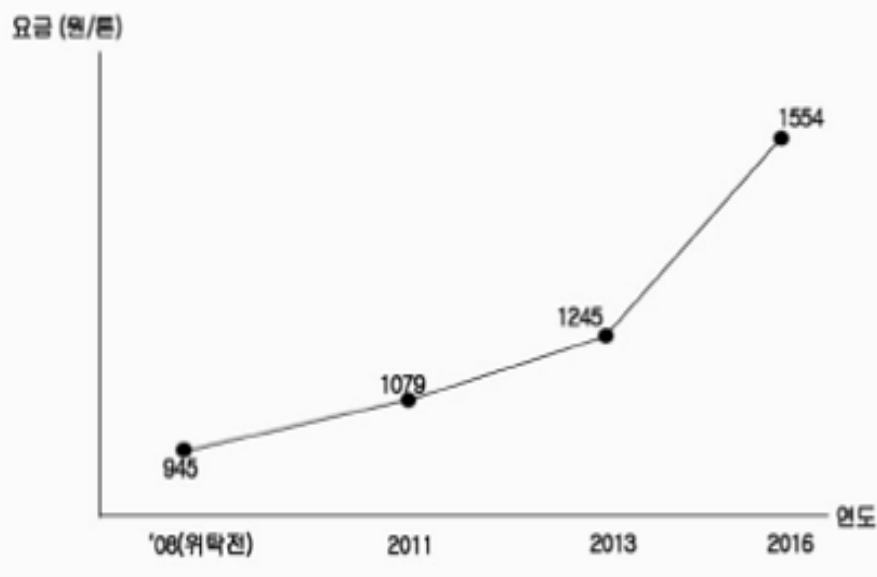
상수도 민영화는 물 재앙으로 이어진다 붕이 김선달 법, 물산업지원법안 반대!

2008년 물 민영화가 시작된다

정부는 오는 6월 『물산업지원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방자치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상수도 법인기업을 만든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제 정부는 물 팔아 돈 버는 기업, “붕이 김선달” 기업을 만들겠다고 한다.



남원시 상수도 위탁에 따른 요금인상 계획 (출처: 남원시)



물 값이 대폭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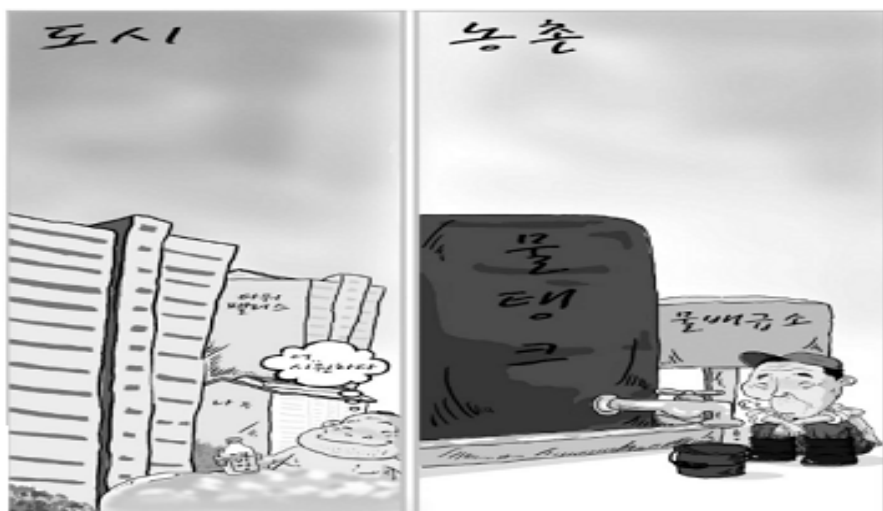
정부는 물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면 물 값 상승이 크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상수도를 민간 위탁한 논산시 등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큰 폭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2001년 상수도를 민영화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매년 30-40% 가량 가격이 상승했고, 94년 물 민영화를 단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가격이 600% 상승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물 불평등이 더욱 커진다

현재도 도시와 농촌 간의 상수도 가격 및 보급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 도시의 경우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읍면 단위 농촌은 30% 이하이다. 가격도 농촌 지역의 수도 가격이 도시의 두 배 이상이다. 상수도가 민영화되면 이러한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민간 기업이 상수도를 운영하면 첫 번째 목표는 이윤을 남기는 것인데, 인구밀집도가 낮고 많은 시설을 요구하는 농촌 지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현재 있는 상수도 시설도 방치하여 물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상수도 민영화 철회가 세계적 대세다

90년 초반부터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상수도를 민영화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시설투자 미비로 상수도원이 오염되었고, 남아공에서는 민영화 이후 빈민들에 대한 단수조치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사태까지 있었다. 이러한 물 민영화 이후의 부작용으로 인해 이제 많은 국가들이 물 민영화를 철회하고 다시 정부가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물 민영화를 막아내자!

“물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유한한 자연자원이며 공공재이다.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물에 대한 권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유엔 사회인권위원회>
21세기에 부활한 붕이 김선달 법, 물산업지원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시민에게 깨끗하고 싼 물을 제공할 물 인권 법안이지, 민간기업의 이윤만 채워줄 물 민영화법안이 아니다.